

정례브리핑

2021.4.26.(월) 10:5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4월 27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체결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를 기념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며, 주요 행사에는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4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민화협과 한국종교인회의,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통문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민화협과 7대 종단, 북민협,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 온 주요 민간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합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6.15남측위'가 삭제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민간 차원에서부터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실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서 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강원도 교육청 주체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 체험장 개장 행사가 열립니다. 제진역은 동해 북부선 최북단 역으로 2007년 우리 측 제진역과 북측 금강산역 간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이루어진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곳 제진역사에 가상현실 등 3D 영상기술 등을 활용한 평화열차 체험장이 문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통일부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여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이라는 제진역의 미래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산림청 주체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3억 그루 나무 심기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실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관은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철현 의원 등 국회의원 36사람이 공동 주최하는 남북생명공동체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남북 간 인도적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4월 26일에는 종전 선언과 개성공단 문제를 중점 논의하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토론회가, 4월 27일에는 서해5도 수역 범

제화 학술 대회가, 4월 28일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전 개막전이 열리는 등 이번 주 내내 여러 행사가 이어집니다.

통일부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국민과 함께 판문점선언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번 계획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41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고요. 이번 주 중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남북영상회의실 구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도 남북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남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영상회의실을 구축해 왔습니다. 관련 공사가 완료되었고, 오늘 오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의 추진 방식을 설명드리고, 판문점과 남북회담본부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에는 지난해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2021년 통일백서를 발간합니다. 2021년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 인도적 협력,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총 7장으로 구성되고 1만 부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중 국경봉쇄 해제 움직임 관련해서요. 민화협 측은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따로 북한과 연락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중 국경 동향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중 간 물류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 준비 동향 등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물류 운송의 재개 여부와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대비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로서는 남북 간, 특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협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도적 협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중 국경 동향 등 전반적인 추진 여건, 민간단체의 입장 등 제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동향 등은 민간단체 인도 협력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보면서 이 계기에 우리 민간단체 등의 인도 협력도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관련해서 행사 여러 가지 소개해주셨는데, 정부 주체로 행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지난주에 4차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판문점선언의 의미도 되짚어보고, 그리고 실천 의지도 다지는 그런 계기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도 확정을 하고, 남북 간 영상회의실 등 남북대화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을 기념하는 방식 가운데에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 개최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기념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 간 각급에서의 대화가 조속히 복원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러 차... 여러 계기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조속히 복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일관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남북대화가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질문 주신 대로 현재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만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더불어 세기와'와 관련해서 한 대형 서점에서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통일부 당국자께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물자 반입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위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현황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명드렸던 대로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의 출간과 관련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 등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출판 경위 등을 좀 더 파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일부 시민단체 등이 회고록의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요. 경찰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당국 등에서의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한데 질문이 안 들립니다.

<질문> 이번 주 중으로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외교부에서 미국과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합의하겠다고 한 맥락에서 해당 시행계획이 미국과 사전에 공유가 됐던 정보인지, 또 어떤 단계에서 조율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이미 2018년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3대 목표,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이와 같은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가 해나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도 시행계획을 마련했구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시행계획의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전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간에 다양한 정책협의 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3대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 정책 환경 속에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어떤 것들을 추진할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한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의 기회가 한미 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한미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방금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 신포조선소 SLBM 탑재

가 가능한 3,000t 급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북한이 기존에 잠수함... 잠수함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동향이나 도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 북한의 잠수함 개량과 관련해서는 북한 보도 등을 통해서도 몇 차례 북한이 그와 같은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개량의 방향성 그리고 그런 목표 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얘기한 대로 정부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주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만 한 다른 정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